

신문 모니터

- 문서번호 부산총감연2020-0311-신문01
- 수 신 각 언론사 미디어 및 NGO 담당 기자, 사회부 기자
- 발 신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 제 목 선거 보도, 유권자와 정치권 연결하는 고리되어야
- 날 짜 2020년 3월 11일(수)

선거 보도, 유권자와 정치권 연결하는 고리되어야

부산2020총선미디어감시연대지부 신문 모니터팀은 부산 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를 대상으로 선거 보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다음은 신문 보도 1차 보고서이다.

분석기간	3월2일(월)부터 3월6일(금)까지
분석대상	국제신문, 부산일보
분석기사	제목은 물론 내용에서도 “선거”, “총선”, “지역구”, “지지율”, “유세” 등 선거와 관련된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명 기사 모두

△ <표1> 부산 지역 일간지 4·15 총선 관련 보도 양적분석 개요

선거 관련 기사 ‘53건’ 중 해설·기획 기사는 ‘0건’

3월 첫째 주 보도는 총 ‘504’건이었고 이 중 선거 보도는 ‘53건’으로 하루 평균 ‘5건’이 선거 관련 보도였다.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획이나 해설 기사는 없었다.

구분	국제신문	부산일보
총 보도 수	266	238
선거 보도 수	29	24
비중	10.9%	10.0%

△ <표2> 부산 지역 일간지 선거 관련 보도 수

	국제신문	부산일보
스트레이트	28(96.6%)	23(95.8%)
기획, 연재, 특집	0	0
인터뷰	0	0
사설	0	0
칼럼	0	0
사진	1(3.4%)	1(4.2%)
사실확인보도	0	0
신문 기타	0	0

△ <표3> 보도유형

**통합당, 민주당 부산시당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유권자는 어디에?**

실제로 3월 첫째 주는 공천 윤곽이 드러나면서 유력 후보가 낙천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지역이 경선에 부쳐지기도 해, 공천 관련 내용의 뉴스 가치가 커 보이는 면도 있다. 하지만 공천 기사를 살펴보면 지역 정치권에 떠도는 말에 의존해 계파 문제로 공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일보는 <PK에도 칼 빼든 민주 공관위…“지역 현실 무시” 곳곳서 반발>(3/2) 등의 공천 결과를 다룬 기사에서 “지역 내에서는…비판이 있다” “…우려도 당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고 국제신문은 <이언주 광규택 탈락?…부산 중영도 공천발표 앞두고 ‘발칵’>(국제신문 3/5) 등 양당의 공천 결과를 다룬 6개의 기사에서 ‘한 통합당 사하갑 인사’ ‘당 안팎에서’ ‘지역 정치권 관계자’ ‘최고위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지역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모양새다” “지역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뒷말이 무성하다”고 썼다. 전반적으로 3월 첫째 주 선거 보도는 양당의 부산시당 관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유권자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 보도에 그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개별 후보자 약력	2	1
정책및공약	0	0
후보 인물	1	2
공천	24(82.7%)	16(66.6%)
선거전략	0	0
선거판세/여론조사	9	9
후보동정	0	0
선거법	0	0
시민사회동향	0	0
기타	1	0

△ <표4> 매체별 보도주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훈수’는 무려 5번이나 언급한 지역신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3월 4일 공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편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부산일보는 3월 5일 1면에 사진과 함께 <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라는 편지 속 메시지를 그대로 제목으로 단 기사를 싣고, 이어 정치면 머리기사로 <“보수 결집” 탄핵 이후 첫 옥중 훈수 ‘파괴력’ 촉각>을 썼다. 옥중 편지가 “남은 총선과 향후 정국 향배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파괴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하기도 했다. 기사 말미에는 “이날 서신은 … 정식절차를 밟아 반출됐다”며 보도의 정당성에 힘을 보탤다. 다음 날 부산일보는 5면 하단에 <“선거법 위반” vs “보수통합 메시지”>(3/6)을 실었으나 기사의 양과 위치, 사진 유무 등을 볼 때, 선거권이 없는 범법자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비중 있게 다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 기사로 보인다. 국제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3월 6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으나 3월 11일인 현재까지 해당 내용은 지역 신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부산 시민단체, 박근혜 고발…“옥중편지는 선거법 위반”, 뉴스1, 3/7). <https://www.news1.kr/articles/?386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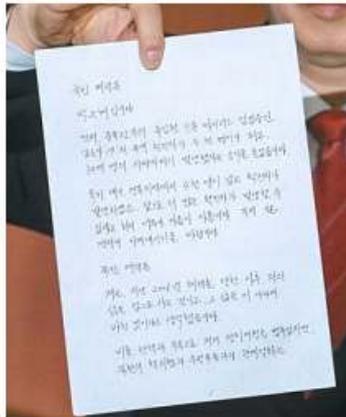
박근혜 “거대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

서울구치소서 자필 서한 보내

4·15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관련기사 6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유명하 변호사가 국회에서 공개한 자필 서한(사진)을 통해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배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합집산을 하는 것 같은 거대 야당의 모습에 실망했지만 보수 외연을 확대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였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에 4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부디 잘 견디어 이겨내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Joy **심&여유** ▶14·15면

△ 부산일보 3월 5일 1면 우측 하단

“보수 결집” 탄핵 이후 첫 옥중 훈수 ‘파괴력’ 축각

박근혜 옥중 서신 파악

총선 앞두고 보수 ‘빅텐트’ 주문 통합당 ‘총선 승리로 보답’ 환영 여론 ‘탄핵 부인 선동 정치’ 비난 범보수·범진보 결속 강화 주목 여야 유불리는 아직 미지수

4·15 총선이 4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을 호소하는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정치권은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소위 ‘탄핵의 강’을 남지 않고 통합당과 거리를 두던 우리공화당 등 대각기 세력이 합류하는 보수 ‘빅텐트’를 주문한 것이다. 남은 총선과 향후 정국 전개에 커다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탄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은 “총선 승리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의 결집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문과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신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kimgsh@naver.com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문과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신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범보수·범진보 결속을 향한 구제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탄핵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은 “총선 승리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국민의 결집을

이 주축이 된 새로운보수당이 다시 손을 잡고, 안철수계를 비롯한 중도 성향 인사들까지 합류한 통합당이 보수우파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통합당에 표를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대각기를 들었던 여론”이라며 탄핵 국면에서 생겨난 ‘대각기 세력’ 또는 ‘경외론 광장 세력’을 직접 언급하며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자유공화당(가칭)으로의 통합을 선언한 우리공화당과 자유통합당, 그리고 친박신당 등을 향해 통합당과 연대 혹은 합당하라는 메시지도 썼다. 자유공화당은 “각각 ‘통합당’에 우리들 함께할 수 있는 재능을 요청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 즉 통합당으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무능을 들었다. 그는 “많은 편이 무능하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인 편 집권세력”으로 인해 점점 더 힘들어왔다고, 현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겠다고 했다.

이날 서신으로 남은 총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이 통합당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설

립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통합당 창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다.

통합당 합교안 대표는 “통합당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 명실상부한 정통 자유민주 세력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에 도전해 오늘날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언급했던 박 전 대통령의 ‘책망’을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 공천 결과를 발표하면서 거듭 요구했다.

다만 중간 선거 탄핵 대통령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에 나서면서 범진보 보진권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의 유불리를 가늠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가 거진 진행되면서도 흐름 경우 거대 야당에 유리한 정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전보 진영에서 정당을 준비하고 있는 비례 연합정당 창당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날 서신으로 남은 총선 국면에서 보수 진영이 통합당으로 집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이 경우 상당한 파괴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설

립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통합당 창당에 힘을 실어 주면서다.

△ 부산일보 3월 5일, 정치면 머리기사

정의당은 민주당 비판할 때만 등장해

3월 첫째 주 보도에서 정의당은 민주당을 비판할 때만 등장했다. <표5> 에서 보듯, 정의당은 국제신문·부산일보에서 각각 2회씩 언급됐다. 정의당이 언급된 기사는 모두 ‘준연동형비례대표제’ 관련 기사였다. 이 중 3건에서 정의당은 “비례민주당이든 연합정당이든 꿈수 정당”(부산일보, 3/2), “꿈수에 꿈수로 맞서는 대응 방식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국제신문, 3/3), “그렇다고 위헌적인 비례 위성정당으로 맞수를 두는 것은 잘못됐고 효과적이지 않다”(부산일보, 3/4)라는, 민주당 비판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만 인용 됐다. 다른 1건인 <여 ‘비례용 빅텐트’ 속도…정의당은 불참>에선 비례연합정당에 불참하기로 한 정의당 입장이 전달되긴 했지만, 오히려 해당 기사가 함께 갈무리하고 있는 박근혜 옥중 서신에 대한 “탄핵 당한 전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선거 개입을 하는 행태도 묵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더 강조됐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정의당 비례대표 관련 기사는 없었다. 3월 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정의당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 선출 투표나 비례대표 후보 면면에 대한 기사는 단 1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3월 11일인 현재,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결정됐으나 이도 보도되지 않고 있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더불어민주당	18	13
미래통합당	26	17
정의당	2	2

△ <표5> 선거 보도 등장 정당

선거구 확정안에 대한 후보자 셈법, 알고 싶지 않다

지난 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남구갑·을 선거구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연1동, 3동이 남구를 지역으로, 우암동, 감만동, 용당동이 남구갑 지역으로 조정돼, 지역 신문은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을 예상했다. 남구 선거구 확정안과 관련해 국제신문은 3건, 부산일보는 1건의 기사를 실었다. 이 중 국제신문 <“경기 화성처럼 선거구 미세조정” 부산 남구 ‘동 쪼개기’ 마지막 희망>(3/6)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구 확정으로 인한 후보들의 유·불리에 초점을 맞춘 판세분석 보도였다.

부산 남을 이동 ‘대연3동 표심’, 당락 최대 변수 부상

남구서 유권자 두 번째 많아 역대 진보 후보에 많은 표 5개 동 이동 획정위 안 관심 여야 반발, 획정안 바뀔 수도

“대연3동 표심”이 부산 남구 지역 2개 선거구의 ‘4·15 총선’ 결과를 가늠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남구에는 갑과 을, 2개 선거구가 있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든 을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두 지역 일부 동을 서로 주고받는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에서 대연3동 투표에 전체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에서 두 지역 총선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연3동 유권자는 2만 7877명(2월 말 기준)으로 남구에서 용호1동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핵심 지역이다. 또 대연혁신지구와 대야 등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지만 갈라스러운 선거구 이동이 이런 흐름을 변화시킬지도 주목된다.

최근 중앙선관위 소속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는 남구 갑·을 지역 경계가 대폭 조정됐다.

구분	선거번호	주요 후보 득표	당선인
7대 지방선거 (2018년 6월)	2만 6368명	더불어민주당 박재원(7677표), 자유한국당 박재원(4800표), 바른미래당 유정기(714표), 정의당 한정길(658표), 무소속 강원호(595표)	박재원
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2만 5399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8308표), 자유한국당 홍준표(5128표), 국민명당 안철수(3373표), 바른정당 유승민(1741표), 정당당 선상(1093표)	문재인
20대 총선 (2016년 4월)	2만 7104명	새누리당 김경순(8605표), 더불어민주당 이경환(7926표)	김경순
19대 총선 (2012년 4월)	2만 2067명	새누리당 김경순(5991표), 민주통합당 이창래(4443표), 무소속 강원호(229표)	김경순

획정안에 따르면 기존 남갑에 속한 대연3동과 대연4동은 남을로 넘어가고 대신 남을 지역에서 갑만1·2동, 우암동이 빠져 남갑으로 조정된다.

독립 선거구로 유지하려면 인구하향선(13만 6565명)을 넘어야 하지만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남을 지역이 미달된다. 선거구획정위가 부산 18개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하고, 대신 남갑·을 지역 일부 동을 조정해 두 지역 모두 인구하향선을 맞추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모두 5개 동이 이동하지만 이 가운데 대연3동의 이동에 각 당 후보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열린 두 차례 선거에서 대연3동 유권자 신변이 승부를 갈랐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박재원 후보는

이곳에서 7600여 표를 얻어 4800여 표 득표에 머문 자유한국당 박재원 후보를 누르고 구청장에 당선됐다. 2017년 대선 때 승리한 문재인 후보도 이 지역에서 총 득표 3000표 이상 얻었다.

남갑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내심 ‘손해 볼 것 없다’는 표정이다. 최근 선거에서 대연3동은 진보 우세 쪽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연혁신지구에 몰려들어 투표 성향이 진보 쪽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한다. 대연3동 원룸 등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도 이런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갑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연3동을 주고 대신 남을은 갑만1·2동과 우암동은 보수 우세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선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실재철 원내대표, 민주통합의원모임 유성일 원내대표 등이 4일 국회 로템타워에서 선거구획정안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비후보는 화제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남을 후보들은 유권자 혼란을 우려했다. 남을 현역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대연3동 등 동을 조정한다는 내용의 획정위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면서도 “획정위 안이 유지된다면 모든 후보가 새로 적응해야 하는데 따로 유불리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갑만·우암동에 공

을 많이 쏟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낄

어리는 평가가 나온다. 통합당 오은택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이 갑인지 을인지도 헷갈릴 것”이라며 “구의원·시의원 시절 이 지역 인맥을 다양하게 맺어 놓아 불리할 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연3동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대연3동 투표 성향이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남갑 김성일 예비후보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낄지 후보

로서 면목이 없어 하루 종일 대연3동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논의를 미루다 뱉어진 일 아니냐”고 반박했다.

다만 여야 모두에서 반발이 큰 만큼 획정위 안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위가 제출한 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재의를 공식 요청했다.

김영환 이인철 기자 kim01@busan.com

△ 남구 선거구 확정안에 따른 정당 간 유불리 따진 보도(부산일보, 3/5)

부산일보의 <부산 남을 이동 ‘대연3동 표심’, 당락 최대 변수 부상>(3/5)은 남구 선거구 조정 지역 중 ‘대연3동’에 유독 주목한 기사였다. 기사는 “‘대연3동 표심’이…‘4·15총선’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연3동의 이동에 각 당 후보와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술하며 대연3동 띄우기에 나섰다. 해당 기사는 ‘대연3동은 최근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젊은 유권자가 많은 지역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연혁신 지구에 몰려있다’, ‘대연3동 원룸 등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도 이런 흐름을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의 서술을 통해 이번 선거구 확정안이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한 ‘안’인지에 주목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의 <부산 남갑·을 경계 조정해 선거구 유지>(3/4) 역시 동일한 판세 분석 기사로 아쉬움, 아쉬울 것 없다, 아쉬울 수밖에 없다와 같은 주관적인 감정적 상태를 언급한 부산일보 기사와 크게 다르진 않았다. 해당 기사는 부산일보 기사에 비해 비교적 선거구 확정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구 의원 인터뷰로 그간 지역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충격에 빠졌다”, “허탈하다”,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불리할 게 없다” 등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 입장에서 서술이 두드러졌다. 선거구 확정안 기사에서 선거구는 후보자에게 유리한 ‘표 발’인지 아닌지만 따졌다.

국제신문	부산일보
사하갑 서병수 이종혁 박규택만 여론조사 왜...제외된 예비후보들 '불안'(3/3)	비례 위성정당 본격화하는 민주(3/2)
"여론 심상찮아...1당 뺏길수도" 비례위성정당 군불때는 민주당(3/3)	'코로나 대응' 정부에 목청 높이는 與 영남권 대표 주자들(3/3)
부산 남갑·을 경계 조정해 선거구 유지(3/4)	"꿈수엔 꿈수로?" 범여권 연합비례정당 '탄력'(3/4)
해운대를, 연제 오차범위 내...창원성산, 거제도 접전(3/4)	박근혜 "거대 야당 중심으로 힘 합쳐달라"(3/5, 1면)
박근혜 총선 앞두고 '옥중정치'(3/5)	"보수 결집" 탄핵 이후 첫 옥중 훈수 '파괴력' 촉각(3/5)
부산 남갑·을 선거구 예상 넘은 경계조정...거센 후폭풍(3/5)	부산 남을 이동 '대연3동 표심', 당락 최대 변수 부상(3/5)
김영춘, 서병수 맞대결 홍준표, 김태호 컷오프(3/6)	후보 자격 회복 김비오, 민주 중영도 경선 참여(3/5)
여 '비례용 빅텐트' 속도...정의당은 불참(3/6)	부산진갑, 전직 부산시장-대권 삼룡 '운명의 한판'(3/6)
통합당 '박근혜 편지' 반겼지만...실질적 보수 대통합 '먼 길'(3/6)	"선거법 위반" VS "보수통합 메시지"...'박근혜 옥중 편지' 공방(3/6)

△ <표6> 판세분석 기사 헤드라인 목록

선거에서 언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나 코로나 여파로 그간 거리유세, 면대면 접촉에 의존해온 선거운동도 제동이 걸린 지금, 유권자와 정치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 그럼에도 3월 첫째 주 지역신문은 시시각각 바뀌는 공천 소식을 익명의 취재원에 의존해 전달했고 그 결과 바뀐 내용을 전달하는 데 선거지면을 할애하게 됐다. 그나마 유권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남구 선거구 확정안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이슈마저도 유권자가 아닌 정당 간 유·불리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유권자를 외면했다. 정치권의, 공관위의, 후보자의 일방적인 발언만을 유권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유권자와 정치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고리로서의 선거보도를 기대한다.